

의정칼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

5·18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남은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들이 생각하는 5·18의 문제점을 행정과 대중에 전달하고, 5·18행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냈으며, 무엇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밀행적 진상규명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오월의 대화'를 통한 소기의 성과라 할 것이다.

5·18특위는 조사위의 개별보고서 의결을 전후해 개별보고서의 공개와 시민의견수렴, 종합보고서의 교정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광주시, 언론, 공법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공법단체, 기념재단 등에 공동대응(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다. 이후 라운드테이블에서 결정된 내용을 조사위에 요구하는 채널 역할을 자청했다.

그러면서 성명 발표, 언론 출연 등을 통해 조사위를 대외적으로 압박하면서 개별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민변 소속 16인의 변호사와 광주전남기자협회 조사위 보고서 검토단 소속 7인의 기자와 함께 공개된 개별보고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종합보고서의 작성시에 개별보고서의 오류를 교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던 여러 단위들의 애끓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발표된 진조위 최종보고서는 많은 숙제를 남겼다.

5·18특위가 활동보고서 채택을 한 이후에도 국회를 찾았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위가 남긴 숙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4년에 걸친 진상규명 이후에도 여전히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나, 서둘러 진상규명작업에 착수하기보다는 진조위의 활동내용과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작업이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조사위가 이미 거액의 예산을 들여 활동을 마친 상황에서 "잘못됐으니 다시 해달라"라는 말만으로도 또다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세금을 쓸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잘못된 부분이 확인됐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완책을 마련했으니 진상규명을 이어가 달라"고 말할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숙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며, 광주시의회 5·18특위가 하지 못한 일을 광주시의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매조지를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5·18특위는 광주시의 5·18정책과 사업이 시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원인을 기본조례 없이 산발적으로 제정돼 방만하게 시행되는 조례에서 찾았고, 정비작업을 통해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해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또 민변, 여성단체연합을 5·18성폭력피해자들과 연결해 보상과 소송절차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5·18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고 전남, 제주 등 국가 폭력의 역사를 가진 지역의 의회들을 묶어 상시적 협력체계(민주평화벨트)를 구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헌법수호 집목시위' 이후 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영광의 순간도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5·18을 지키고자 매순간 용기를 내어 말하고 행동했으나, 받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했음이 부끄럽다. 그렇기에 제45주년 5·18기념식에서는 헌법에 수록된 5·18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남은 힘과 시간을 들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社說

여수박람회 투자금 회수는 사후활용에 찬물 끼얹는 것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세계박람회 국가 선투자금 3천600억원을 재투자 방식으로 사후활용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박람회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105개국 80만명의 관람객이 참여, 흥행에 성공했다. 해양산업과 과학기술의 강국 대한민국 가능성을 엿보는 무대 큰 주목을 끌었다. 이후 시설에 대한 매각과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돌출됐으며, 2022년 특별법을 개정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운영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여수의 자랑스런 유산으로 박람회장이 활용되고 있고,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투자금 회수 방침을 통해 박람회장이 활용되고 있고,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투자금 회수 방침을 통해 박람회장이 활용되고 있고,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박람회를 즐기고 해상케이블카를 타며 야경의 매력에 취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남해안 남중권 거점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부상할 체비를 마쳤다. 여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0여 년간 표류했던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가 드디어 본궤도에 들어섰다. 여수의 경쟁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2023년 9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섬박람회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섬을 가진 나라, 섬의 가치를 연구하는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섬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모색하는 국제행사다. 2012박람회의 바다, 연안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섬의 생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기획재정부가 투자금을 부채로 전환하고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이윤배반이다.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화정근린공원 맹꽂이 서식지 사실상 방치 아닌가

광주시가 최근 조성한 서구 화정근린공원 내 맹꽂이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성체 기준 몸길이가 약 45cm에 달하는 맹꽂이는 '쟁기밭개구리'로도 불린다. 피부 호흡을 해 유해 화학 및 오염 물질이 있는 곳엔 살 수가 없어 환경 건강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사용되는 멸종위기 생물이다.

화정근린공원은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를 활용 10만7천606㎡ 규모로 지난달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치유의 숲, 추모의 길,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춘 도시공원으로 앞서 2020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포유류 2과 2종, 양서류 2과 2종, 파충류 1과 1종, 조류 9과 12종, 육상곤충류 20과 20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서류에 법정보호종인 맹꽂이(멸종위기 2급)가 포함돼 이목이 쏠렸다.

2022년 정밀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수는 14마리로, 광주시는 따로 공간을 마련해 한데 모여 살도록 유도했고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다. 하지만 보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서식지에는 플라스틱과 고철 등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인근에 주차장이 운영돼 차량에서 나온 매연의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다. 피부 호흡하는 맹꽂이 특성상 치명적이어서 긴급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화정근린공원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도 보존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됐듯 다양한 생물이 어울려 살고 있어 생태학습장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관리 상의 문제가 드러나는 현실이 무척이나 아쉬운 것이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련해 광주시가 구체 기준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선 안되겠다. 유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방안 안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과 환경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맹꽂이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고



설재훈
곡성군농촌신활력사업 추진단장

방향지시등을 켜시다

하지만, 멋지고 세련된 외양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갑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필자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지시등을 켜자'는 것이다. 일명 '깜박이'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의 기능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이 자동차의 이동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얼굴을 보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서 운전자의 생각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약속된 행위이다.

그런데,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회전하는 차량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필자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은 이름깨나 날리는 유명한 외제차이거나 혹은 젊은 친구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방향지시등이 장식품인가? 예일까?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방향지시등을 켜는 게 쪽팔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제38조1항(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이다.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량들이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행동이라도 반드시 실천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무단으로 들락거리는 자동차 없이 질서 정연하고 교통사고도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첫번째 운전 에티켓으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방향을 전환하는 어찌면 당연한 일, 아름다운 습관을 생활화하자.

방향지시등을 켜는 일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생활에서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었다.

날이 갈수록 자동차의 기능은 발전해 AI 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편의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차종도, 기능도 다양할 뿐 아니라 외양도 세련미를 거듭해 각양 각색의 모양을 갖춘 예쁜 차들이 즐비하다.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엔진을 비롯한 기계적 기능이다. 둘째는 파워스티어링을 이용하는 조향장치를 비롯하여 음향장치 등 실내 편의 사양이다. 마지막으로 라디에터 그릴과 헤드라이트와 방향지시등과 같은 외양의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엔진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자투고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와 행복한 삶을 찾아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4천명이다.

공사판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한 탈북민이 남한 부족음으로 재입북 하는 사례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들이 다시 입북을 하지 않고 우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이웃...편견 버리고 관심을

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탈북민의 가장 큰 애로는 주변의 왜곡된 시선이다. '탈북민은 사회주의 체제에 젖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노력은 하지 않고 지원만 받으려고 한다' 등의 편견 때문에 북한에서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며 구직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법(20

16년 10월에 제정됐으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선입견 배제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감을 넘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손 내미는 친근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창구·담양경찰서 경비반보과>

'투자 리딩방 사기'란 투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범죄의 한 형태로, 주로 투자 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허위 정보나 과장된 수익률을 내걸어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범죄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기도 한다.

'투자 리딩방 사기' 주의보

이러한 '투자 리딩방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투자 상품, 회사 등 충분한 정보를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공인된 투자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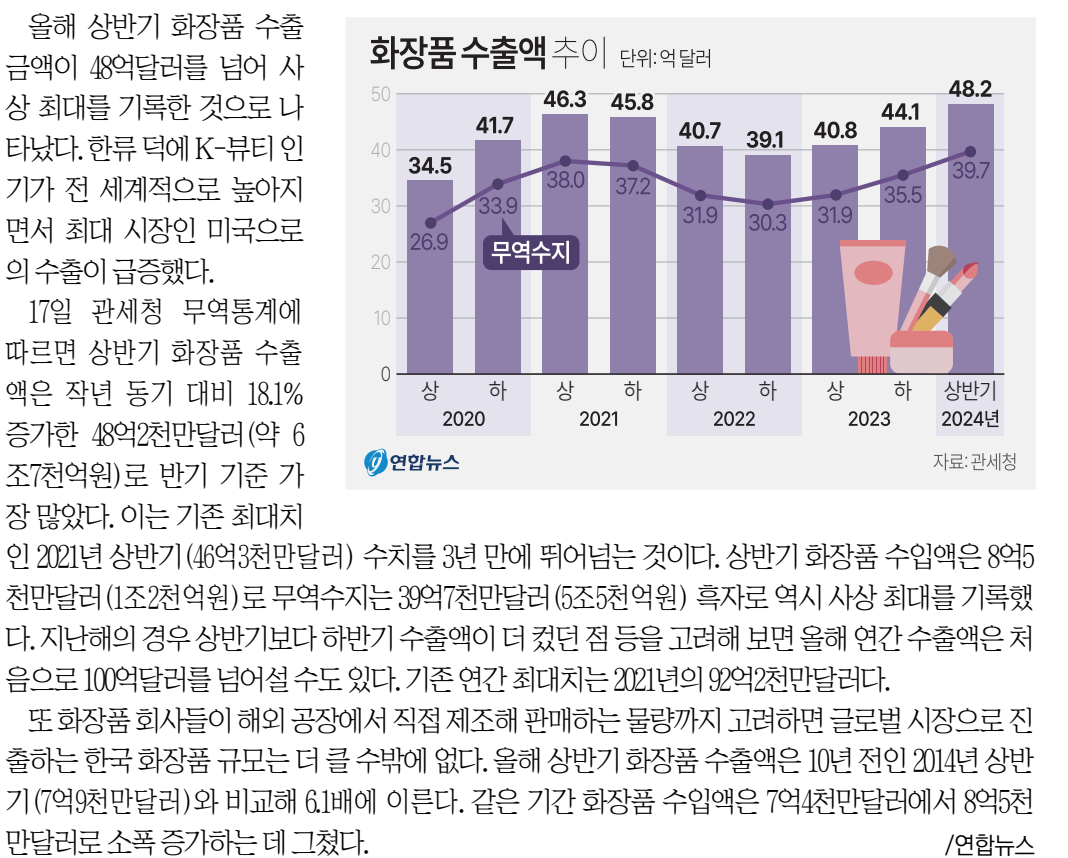
또한 투자리딩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

고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범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심이 동반될 때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배지환·여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그래픽 뉴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48억달러로 사상 최대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규토월 15,000원 1부 800원